

## EAI 여론브리핑 35호 : 정치현안 분석

EAI · 경향신문 공동 정치현안조사 결과

대표집필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주제

주제1. 종교균열, 한국에서 현실화되나?

주제2. 이명박 정부 6개월 정당지지연합(political alignment)의 변화

### 조사개요

조사일시 : 2008.8.28~29

조사대상 : 19세 이상 전국성인남녀

표 본 수 : 600명

표본추출 : 층화확률표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표집오차 : 95%신뢰수준  $\pm 4.0\%$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답율 : 20.5%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 관련자료: EAI 여론브리핑 시리즈

제26호 "총선이후 정국 : 어디로 가나" 김민전 외 (2008.4.12)

제24호 제24호 "요동치는 민심, 표심의 변화로 이어질까" 권혁용 · 정한울 (2008.3.22)

제20호 "2007 대선패널조사 6차 분석 결과 : 대선결과와 총선전망" 이현우 외  
(2007.12.23)

제 8호 "종교와 정치 : 한국의 종교, 정치 분석의 변수인가?" 정한울 외 (2007.02.20)

\* 제목을 누르시면 해당 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구팀

연구팀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

연구진 : 이숙중 (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곽소희(간사)

문의 : 정한울([hwjeong@eai.or.kr](mailto:hwjeong@eai.or.kr)) 02-2277-1683 내선 102, Fax: 02-2277-1684)

## 주제1. 한국정치에서 종교균열 현실화되나?

### 한국 정치에서의 종교균열 가능성 높아져

- 열 명 중 여섯 명(58.9%), “이명박 정부 종교 편향적”, “편향적이지 않다” 15.4%
- 정부의 종교정책은 “편향적”, 불교도 72.0%, 개신교도 39.5%
  - 불교도 72.0%, 천주교인 62.3%, 개신교인 39.5%, 무종교 64.4%
- 한나라당 지지층, “편향적이다” 45.3%, “편향적이지 않다” 27.9%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국에서 종교가 정치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불교계는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지난 8월 27일에는 수십만의 불교신자가 시청 앞을 가득 메웠다. 정부와 여당은 불교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분주하지만 결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미 동아시아연구원은 2007년 초 종교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한국정치를 설명해온 지역/세대/이념 등의 전통적인 요인 외에 종교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매일경제 2월 20일 “[기독교·천주교 이명박, 불교 박근혜](#)”(사진 참조), EAI 여론브리핑 제8호 “[종교와 정치 : 한국의 종교 정치분석의 변수인가?](#)” 정한울 외 2007년 2월 20일 발표문 참조).

현재의 종교계와 정부의 갈등은 개신교 장로 출신의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서울 봉헌’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래 대통령 당선 이후 소망교회 출신인사들이 중용되면서 타 종단과 교인들이 정부의 종교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6월에는 어청수 경찰청장이 경찰복음화 광고 포스터에 등장하고, 정부의 교통 및 교육지리 정보서비스에서 사찰이 누락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교계의 분노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의 차량에 대한 과잉검문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교 종단이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현재 종교 문제가 불교계와 청와대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불교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조사 결과 전체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정부가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이라고 대답했다. 전체 국민의 58.9%가 정부의 종교정책이 편향적이라고 답해 ‘편향적이지 않다’는 응답 15.4%의 네 배 가까이 된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21%,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은 응답’은 4.4%였다.[그림1]

우려되는 것은 종교별로 정치사회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 교인의 72.0%가 현 정부의 종교 편향을 지적했고,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64.4%, 천주교인이 62.3%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개신교를 믿는 응답자의 경우 39.5%가 편향적이라고 답해 정부의 종교편향성에 대해 관대한 평가를 했다.[그림2]

종교별 인식 차이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개신교인의 45.3%가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전체 지지율 평균인 32.8%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반면 불교도와 천주교인 중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33.3%와 29%에 불과해 큰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유권자의 국정지지율은 26.2%로 이명박 대통령에 가장 냉담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그림3]

또한 종교인 별로 이념적 성향에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주관적 자기이념 평가에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개신교가 38.9%로 가장 높았고, 불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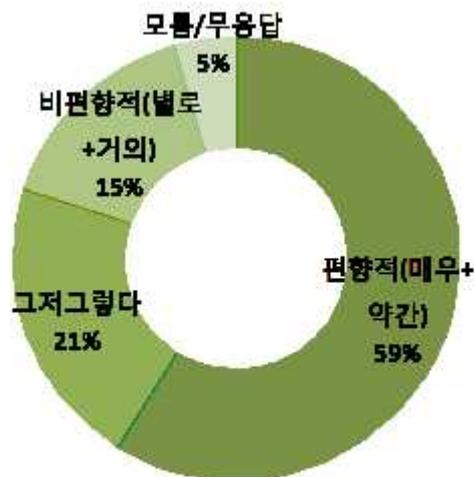
32.7%, 천주교인이 27.5%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동맹강화를 원하는 비율이 개신교 39.7%, 천주교 36.2%로 나타났지만, 불교도의 경우 30.6%, 무신론자들의 경우 28.5%였다. 종교의 차이가 종교관의 차이를 넘어 이념 및 정치적 태도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종교의 차이가 새로운 사회균열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그림4]

더구나 현재 야당의 경우 불교계의 집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 지지자별로도 인식차가 커지고 있다. 정당 지지자 별로 보면 야당 지지자들이 여당 지지자들보다 정부의 종교정책을 더 편향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선진당 지지자의 63.6%, 민주당 지지자의 75.3%, 민주노동당 지지자의 80.6%가 정부정책이 종교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경우도 야당 지지자들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절반 가까운 45.3%의 응답자들이 정부 정책을 편향적이라고 응답했다. 편향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7.9%에 그쳤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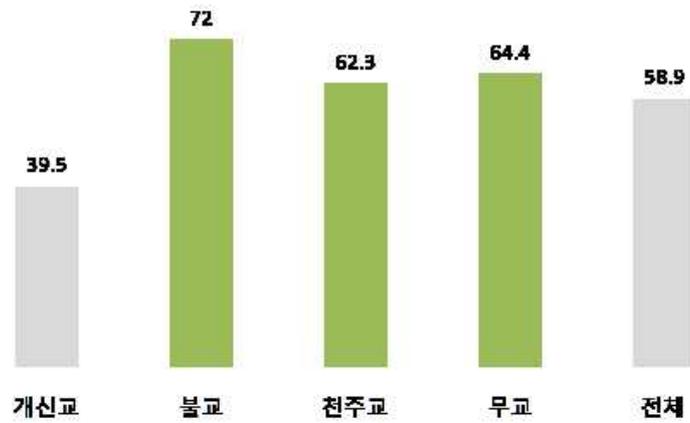
종교는 인간의 이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이다. 따라서 종교를 둘러싼 이슈는 합리적 토론이 쉽지 않을 뿐 더러, 일단 논쟁이 시작되면 격한 감정대립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국제적으로도 종교문제가 정치적 균열로 자리 잡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사회적 통합 및 정치적 협력을 이루기가 훨씬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도 정치사회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정치권과 교단이 '정중분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장의 불교계와 정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종교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지켜 온 '관용'의 불문율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와 교단의 신중한 처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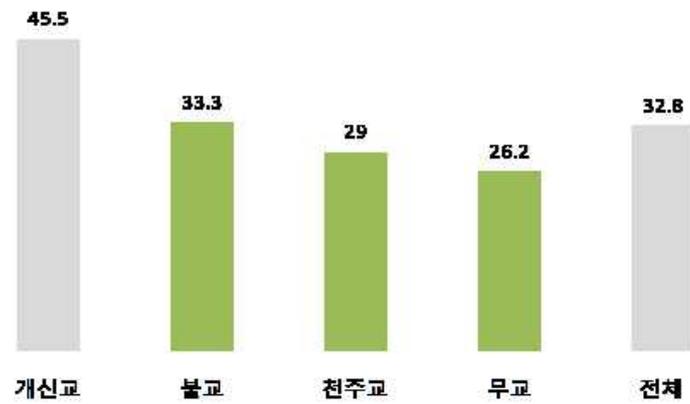
[그림1] 이명박 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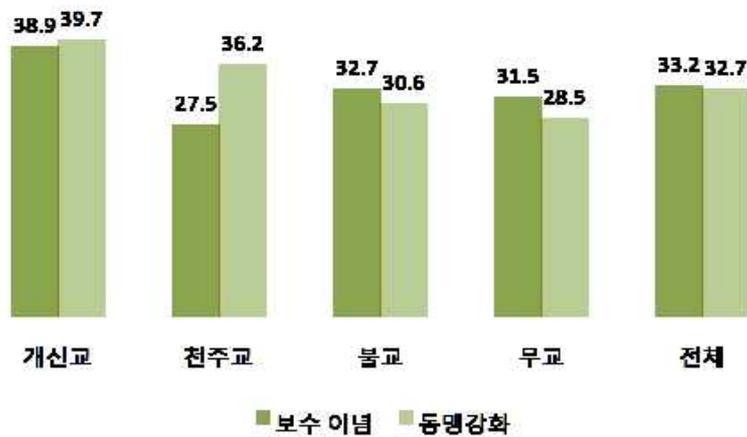
[그림2] 주요 종교 신자별 이명박 정부의 종교정책 “편향적이다”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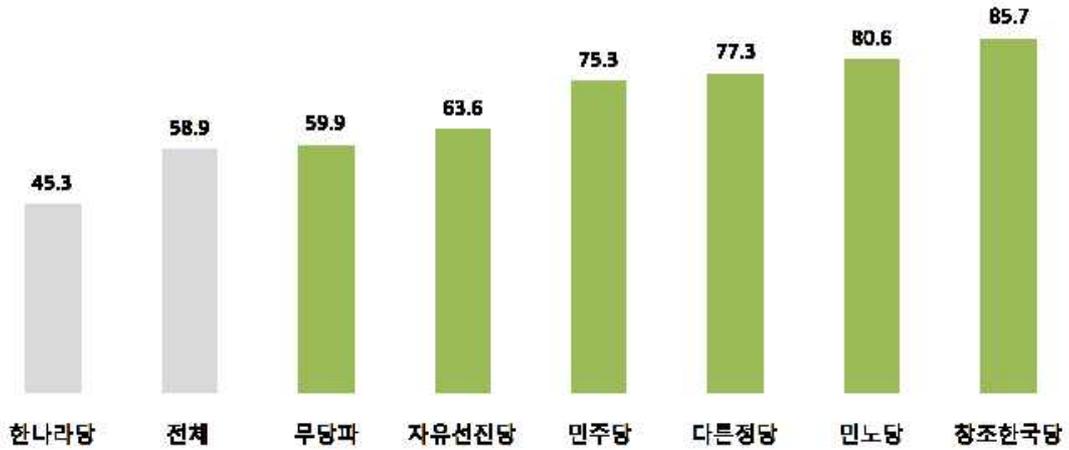
[그림3] 주요 종교 신자별 이명박 대통령 국정평가 “잘하고 있다”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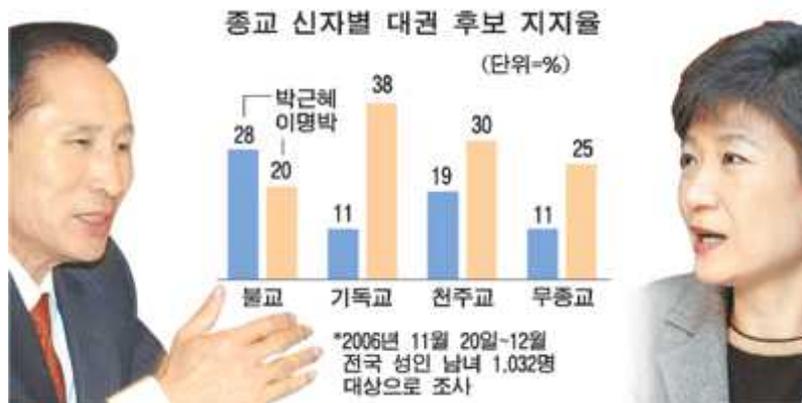
[그림4] 종교 신자별 이념성향 평가(“보수적”) 및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한미동맹 강화”)



[그림5] 정당 지지자별 정부의 종교정책 평가 “편향적”(%)



[사진] 매일경제 2007년 2월 20일자



## 주제2. 이명박 정부 6개월 정당지지연합(political alignment)의 변화

정한울

### 이명박 취임 6개월 이명박 대통령 및 정당지지 기반 변화 분석

- 이명박 지지층 완만한 회복, 한나라 지지기반 이탈심각, 민주당 지지부진, 무당파 급증
- TK와 한나라당 新지지기반(수도권, 30-40대, 중도층)의 이탈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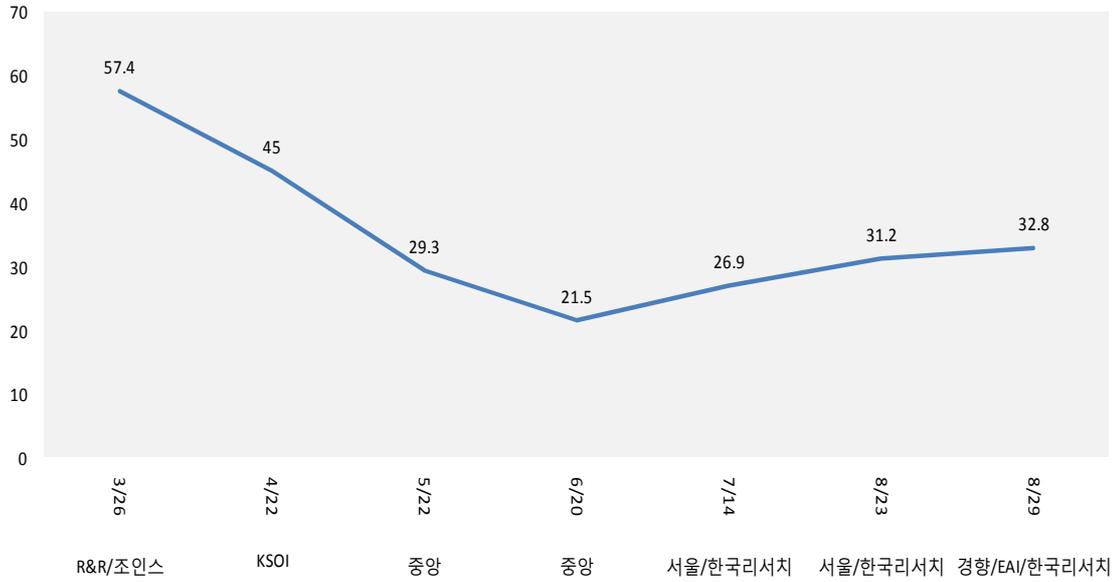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완만하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집권초기 3월 조사에서 6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한 이명박 대통령은 4월 총선과 5월부터 본격화된 촛불시위 정국의 영향으로 6월 10일 전후로는 10%대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6월 18일 쇠고기 추가협상을 거치며 꾸준히 지지율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6월 20일 조사에서 21.5%를 기록한 이래 7월 14일 조사에서 26.9%, 8월 23일 조사에서는 31.2%를 기록했고, 8월 28-29일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도 32.8%로 상승국면을 이어갔다. 그러나 집권 초기 대통령 지지율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해 이후 정국 반전 시도가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그림1]

특히 정국반전을 꾀하는 정부로서 여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안정적으로 40~50%대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했던 한나라당이 이번 조사에서는 얻은 지지율은 28.7%. 지난 2월 EAI·중앙일보 조사에서 얻었던 43.7% 지지율에 비해 15%p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주(8월 23일) 서울신문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나타난 35.1%보다도 6.5%p 하락한 결과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달리 정당 지지율의 경우 최근 2-3년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나라당 지지율 회복은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회복속도를 따라 잡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그림2]

이는 현재 당-정간 나타나는 불협화음이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경우 집권초기의 정권 난맥을 하루빨리 탈피하여 정상적인 국정운영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를 위해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정부의 정책드라이브 과정에서 배제되는 집단의 불만을 아우르고 여러 세력의 입장을 조율하는 사회적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의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조건에서는 정부의 강공을 일관되게 뒷받침하기 어렵게 되고 오히려 스스로 정부에 속도조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견제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참여정부시기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관계에서 발견되는 일관된 패턴이었다.

물론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한나라당이라는 강한 야당이 버티고 있었지만 지금의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 지지율의 절반도 못 얻는 약체 야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실망을 차곡차곡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흡수하여 과반수의 지지를 넘나들었다. 즉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구심력이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집권 6개월 만에 정권의 최대 기반인 TK와 지난 정권에서 반노 정서에 기대어 흡수한 새로운 지지층이 급속하게 이탈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구사하기는 부담스러워 보인다.

[그림1]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변화 (3월~ 8월)



### 정당지지 감소율 분석 (2월→ 8월 6개월 간)

- 한나라당 신지지층(수도권, 30-40대, 중도층)의 이탈 심각: 감소율 비교
  - 2월 43.7% → 8월 28.7%, 2월 대비 8월 지지 증감율 -34.4%p
  - 중도층(-42.5%p), TK(-43.7%p) · 서울(-43.2%) · 30대(-37.0%p) · 40대(-36.4%p)
- 통합민주당 2월 12.8% → 8월 12.1%, 2월 대비 8월 지지 증감율 -5.7%p
- 무당파층 2월 29.3% → 8월 37.9%, 2월 대비 8월 지지 증감율 28.7%p

지난 2007년 대선을 거치면서 45~55% 사이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았던 한나라당의 지지층 이탈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05년 이전까지 ‘영남-보수층-50대 이상-한나라당( 및 그 전신) 지지’ 대 ‘영남/수도권-진보층-20/30대-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지지’라는 패턴이 존재했다. 2006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러한 정당지지 패턴이 크게 흔들렸다. 수도권-20/30대-중도/진보 층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외연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것이 이명박 후보의 대승과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총선 이후 촛불 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전통적 정치기반인 TK와 참여정부 시기 새로 유입된 신지지층이 크게 이탈하고 있다.[표1] 이들은 참여정부 시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실망하여 대거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집단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이념적으로는 중도층, 세대별로는 30~40대에 집중되어 있다.

올 2월 조사결과와 이번 8월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우선 TK 응답자의 경우 올 2월 조사에서 65.8%가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7%로 크게 줄어 들었다. TK가 한나라당 및 그 전신인 민정당, 신한국당의 최대 지역적 지지기반 역할을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과 올 총선에서 불거진 이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간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그림2]

신 지지층의 이탈상황을 보자. 서울에서는 2월에 42.9%에 달했던 지지율이 8월 말에는 24.8%로 줄었고, 경인지역 역시 2월 조사에서 43.6%였던 지지율이 28.2%로 전국 평균 혹은 그 이하로 떨어졌다. 2월 조사와 8월 조사 사이에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감소한 비율을 계산하면 무려 TK에서 42.7%, 서울에서 42.3% , 인천/경기지역에서 34.1%였다. 세대별로는 30대, 40대에서 지지율의 감소 비율이 37.0%, 36.4%였다. 이념적 중도층에서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2월 조사에 비해 42.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2][그림3]

한나라당 지지층의 이탈이 당장 동서-세대간-이념적 대결구조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를 철회한 집단이 통합민주당 지지층으로 복귀하기 보다는 부동층, 무당파 층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제1야당인 민주당은 최소한의 반사이익도 얻고 있지 못하다. 2월 조사에서 12.8% 지지를 획득했지만, 이번 조사에도 12.1%로 그쳐 국민들의 냉담한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파 층은 2월 조사에서 29.3%에서 8월에는 37.9%로 급증하였다.

결국 정부, 여당, 야당 중 어느 세력도 현 정국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낮은 지지율과 당정간 불협화음으로 정부와 여당은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집권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 속에서도 무기력한 야당 사이에서 국정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정국이 야기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전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어떤 이념적 입장이나 당파적 태도를 갖던 현 정국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표1] 사회배경변수별 정당지지 (2월-8월)

분류	시 기	한나라	우리+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노당	창조 한국당	다른 정당	무당파	모름/ 무응답		
전체	8월	28.74	12.13	1.827	5.15	2.326	3.821	37.71	8.306		
	2월	43.82	12.85	2.921	4.382	5.258	0.292	29.31	1.168		
성 별	남성	8월	27.27	13.8	2.02	5.724	3.367	4.04	38.72	5.051	
		2월	43.9	14.57	3.15	5.118	5.906	0.591	25.79	0.984	
	여성	8월	30.16	10.49	1.639	4.59	1.311	3.607	37.05	11.15	
		2월	43.57	11.13	2.687	3.647	4.798	0	32.82	1.344	
지 역	서울	8월	24.81	8.527	3.876	6.977	1.55	5.426	41.09	7.752	
		2월	42.99	12.67	3.167	4.525	2.262	0.452	32.13	1.81	
	인천/경기	8월	28.22	15.34	0.613	4.908	1.227	3.681	40.49	5.521	
		2월	43.62	12.41	3.901	2.837	5.319	0.355	31.21	0.355	
	대전/충청	8월	30.23	4.651	4.651	9.302	2.326	2.326	41.86	4.651	
		2월	39.05	5.714	4.762	6.667	2.857	0	40	0.952	
	광주/전라	8월	4.839	37.1	0	4.839	3.226	0	32.26	17.74	
		2월	7.339	44.04	0.917	5.505	7.339	0.917	33.94	0	
	대구/경북	8월	37.04	7.407	2.469	2.469	4.938	6.173	32.1	7.407	
		2월	65.77	2.703	2.703	4.505	3.604	0	19.82	0.901	
	부/울/경남	8월	43.75	5.208	1.042	2.083	2.083	3.125	34.38	8.333	
		2월	56.89	4.192	1.796	4.79	8.982	0	19.76	3.593	
	강원/제주	8월	26.92	3.846	0	11.54	0	7.692	42.31	7.692	
		2월	46.88	12.5	0	3.125	9.375	0	28.13	0	
	연 령	19-29세	8월	20.63	7.937	1.587	7.143	3.968	3.968	48.41	6.349
			2월	29.95	8.295	1.843	7.373	7.834	0	42.86	1.843
30대		8월	22.46	12.32	1.449	4.348	2.174	4.348	44.93	7.971	
		2월	35.32	13.19	2.553	6.809	6.383	0.851	34.47	0.426	
40대		8월	24.44	16.3	0.741	8.148	2.963	3.704	33.33	10.37	
		2월	38.79	14.22	5.603	4.31	7.759	0.431	28.02	0.862	
50대 이상		8월	41.09	11.88	2.97	2.475	0.99	3.465	29.21	7.921	
		2월	61.92	14.53	2.035	0.581	1.163	0	18.31	1.453	
학 력	중졸이하	8월	41.54	12.31	3.077	1.538	1.538	3.077	26.15	10.77	
		2월	61.87	15.11	1.439	0	0.719	0	19.42	1.439	
	고졸	8월	26.21	11.69	1.613	6.452	2.016	4.839	37.9	9.274	
		2월	51.36	14.29	4.422	1.361	2.381	0	25.17	1.02	
	대재이상	8월	28.52	12.68	1.761	4.577	2.817	2.817	40.49	6.338	
		2월	35.69	11.62	2.525	6.902	7.744	0.505	33.84	1.178	
소 득	200만원미만	8월	33.65	15.38	0.962	3.846	1.923	3.846	24.04	16.35	
		2월	45.95	14.86	1.802	3.153	3.604	0.45	29.28	0.901	
	200-299 만	8월	26.85	12.04	1.852	7.407	0.926	2.778	44.44	3.704	
		2월	47.52	9.901	1.485	4.95	4.95	0.495	28.22	2.475	
	300-399 만	8월	31.37	9.804	2.614	4.575	2.614	4.575	39.87	4.575	
		2월	41.45	10.68	4.701	4.701	5.128	0	32.48	0.855	
	400-499 만	8월	24.21	13.68	3.158	2.105	3.158	2.105	42.11	9.474	
		2월	39.63	15.85	3.659	4.878	6.707	0	28.66	0.61	
	500만원이상	8월	27.83	12.17	0.87	7.826	3.478	6.087	40	1.739	
		2월	41.8	14.29	3.175	4.762	6.878	0	29.1	0	
이 념	진보(0-4)	8월	17.16	18.93	0.592	9.467	4.734	8.284	34.91	5.917	
		2월	24.9	18.77	2.299	8.046	9.962	1.149	34.48	0.383	
	중도(5)	8월	24.42	11.06	2.304	2.304	1.843	1.382	45.16	11.52	
		2월	42.47	12.37	2.341	4.348	3.01	0	33.11	2.341	
	보수(6-10)	8월	43.5	7	2.5	5	1	3	32.5	5.5	
		2월	55	9.96	3.68	2.38	4.11	0	24.24	0.65	

[표2] 2008년 2월-8월 한나라당/민주당/무당파 총 지지율 증감비율(%)

분류항목	2008년 2월 조사			2008년 8월조사			등락율 (8월조사/2월조사-1)*100		
	한나라당	우리+ 민주당	무당파	한나라당	민주당	무당파	한나라당	민주당	무당파
전체비율	43.8	12.9	29.3	28.7	12.1	37.7	-34.4	-5.7	28.7
성별									
남	43.9	14.6	25.8	27.3	13.8	38.7	-37.9	-5.2	50.2
여	43.6	11.1	32.8	30.2	10.5	37.0	-30.8	-5.8	12.9
지역									
서울	43.0	12.7	32.1	24.8	8.5	41.1	-42.3	-32.7	27.9
인천/경기	43.6	12.4	31.2	28.2	15.3	40.5	-35.3	23.6	29.8
대전/충청	39.0	5.7	40.0	30.2	4.7	41.9	-22.6	-18.6	4.7
광주/전라	7.3	44.0	33.9	4.8	37.1	32.3	-34.1	-15.8	-5.0
대구/경북	65.8	2.7	19.8	37.0	7.4	32.1	-43.7	174.1	62.0
부/울/경남	56.9	4.2	19.8	43.8	5.2	34.4	-23.1	24.3	74.0
강원/제주	46.9	12.5	28.1	26.9	3.8	42.3	-42.6	-69.2	50.4
연령									
19-29세	30.0	8.3	42.9	20.6	7.9	48.4	-31.1	-4.3	13.0
30대	35.3	13.2	34.5	22.5	12.3	44.9	-36.4	-6.6	30.3
40대	38.8	14.2	28.0	24.4	16.3	33.3	-37.0	14.6	19.0
50대 이상	61.9	14.5	18.3	41.1	11.9	29.2	-33.6	-18.3	59.5
학력									
중졸이하	61.9	15.1	19.4	41.5	12.3	26.2	-32.9	-18.5	34.6
고졸	51.4	14.3	25.2	26.2	11.7	37.9	-49.0	-18.1	50.6
대재이상	35.7	11.6	33.8	28.5	12.7	40.5	-20.1	9.1	19.7
소득									
200만 미만	45.9	14.9	29.3	33.7	15.4	24.0	-26.8	3.5	-17.9
200-299만	47.5	9.9	28.2	26.9	12.0	44.4	-43.5	21.6	57.5
300-399만	41.5	10.7	32.5	31.4	9.8	39.9	-24.3	-8.2	22.8
400-499만	39.6	15.9	28.7	24.2	13.7	42.1	-38.9	-13.7	46.9
500만 이상	41.8	14.3	29.1	27.8	12.2	40.0	-33.4	-14.8	37.5
이념									
진보(0-4)	24.9	18.8	34.5	17.2	18.9	34.9	-31.1	0.9	1.2
중도(5)	42.5	12.4	33.1	24.4	11.1	45.2	-42.5	-10.6	36.4
보수(6-10)	55.0	10.0	24.2	43.5	7.0	32.5	-20.9	-29.7	34.1

[그림3] 계층별 6개월간 한나라당 지지율 감소비율(%p)

